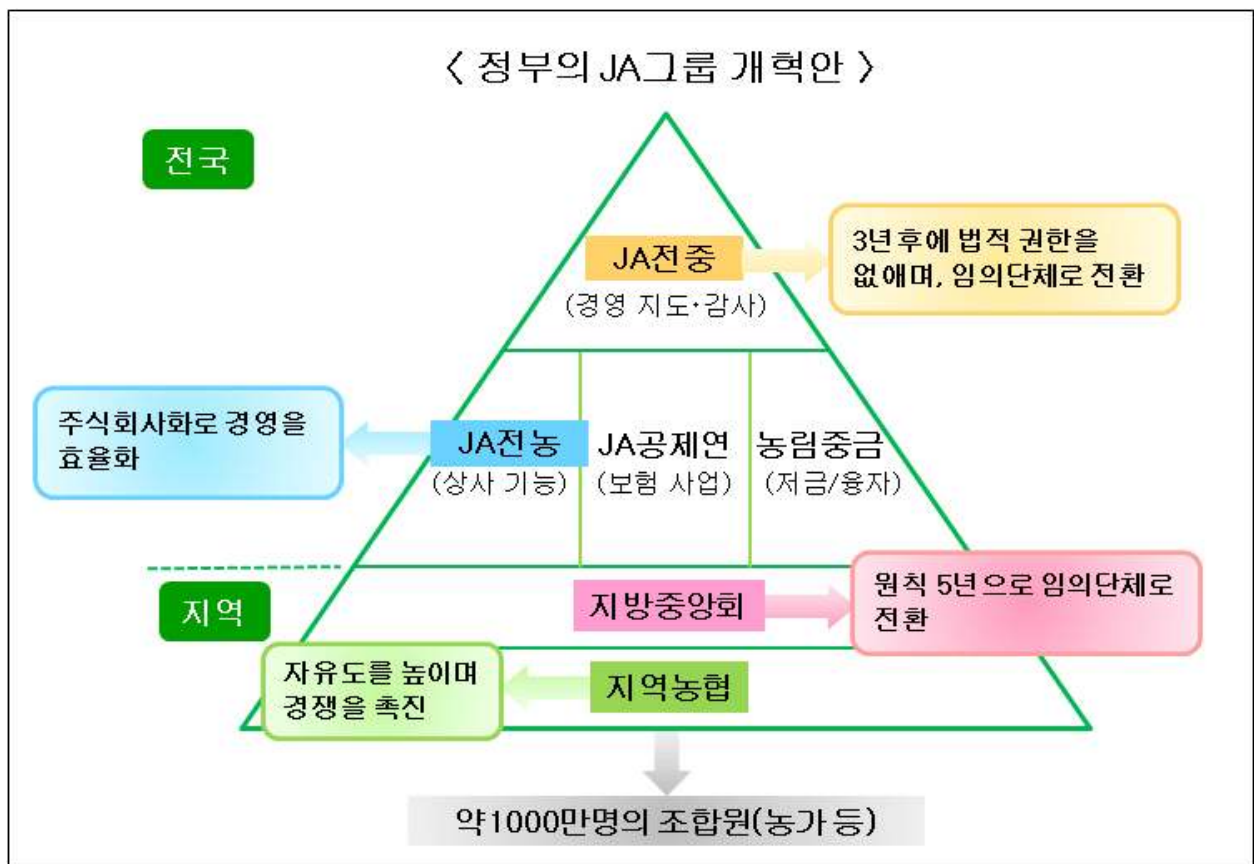


일본 농협법 개정안 발표

- 중앙회의 지도권을 3년내 완전 폐지 -

일본 정부는 1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의 골자를 정했다. 전국의 농협조직을 통합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JA전중: 중앙회)의 지도·감사 등의 권한을 3년 안으로 전폐하고 임의 단체로 전환한다. JA그룹 내에서 중앙회의 강제력을 없애고 지역농협과 농민이 농산물 가격과 서비스, 유통 경로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고 매력적인 국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 개혁의 배경과 아베정권의 개혁

- 농협은 1948년 발족하였다. 농가들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농산물을 유리하게 판매하거나 농기구 등 생산 자재를 싸게 구입하면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탄생하여 주식회사보다 낮은 법인세율 등의 혜택도 받고 있다.
- 중앙회는 1954년 농협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당시는 전후 불황으로 경영 부진에 빠진 지역 농협이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감독 기관으로서 경영 지원이 기대되었다. 중앙회는 한때 1만 이상 있었던 지역 농협을 700개로 재편해 왔으나, 전국의 농협 직원 약 22만명의 집표력을 무기로 기업의 농업 진출 및 무역 자유화에 반대하고 정부와 자민당에 영세 농가 보호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 이러한 JA그룹 및 중앙회를 아베정권은 ‘암반규제’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개혁을 통해 지역 농협이 농민을 위해 상품 개발과 유통 경로의 개척 등으로 경쟁하여 강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개혁이 시작된 발단은 2014년 5월 정부의 규제개혁회의가 제시한 농협개혁안이다. *자체기획 이슈조사 제2호(‘14.5.21게시)참조
개혁안에서는 중앙회에 의한 통제를 없애고 지역 농협에 독자 경영에 의한 경쟁을 촉구했다.
- 개혁안에 대해 당초는 반대의 목소리가 컸으나 JA그룹 내에서는 "정부의 개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작년 가을, 도내에서 JA전중과 농림중앙금고, JA전농 등 JA그룹 간부들이 모이는 회의가 비밀리에 열렸다. 정부와의 철저 항전을 주장하는 JA전중에 대해 다른 조직의 간부들은 “더 이상 반대하면 상처가 깊어지기만 한다. 생산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 일본 전국의 농가가 출하한 쌀과 야채 등의 농업총생산액 약 8조 5000억엔 중 절반은 농협을 경유해서 출하되기 때문에 JA그룹의 가격형성에의 영향력은 크다. 단지 농가는 "농협의 서비스는 아무래도 획일적이고 수수료도 비교적 비싸다"는 불만도 많다. TPP협상을 계기로 강한 농업의 확립을 서두르는 가운데, 개정안은 농협의 경영을 효율화시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안 내용

〈 JA전중 : 중앙회 〉

- 중앙회의 지도·감사 권한과 행정에 대한 건의권 등 법적인 권한을 3년 후에 모두 없애고 다른 업계 단체와 같은 일반 사단법인이나 법적 권한이 없는 농협의 연합회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킨다.
- 중앙회의 권한을 제거하여 지역 농협이 상품 개발과 수출 강화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중앙회는 감사비 등으로 지역농협 등에서 매년 80억엔 정도의 부담금을 거두고 있다. 임의단체가 되면 부담금이 거의 없어져, 지역농협의 자유도가 높아진다. 정부 내에는 부담금을 사용한 TPP교섭이나 기업의 농업 진출 등에 대한 반대 운동을 봉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 JA전농 〉

- 상사 서비스 기능을 갖춘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JA전농)은 주식회사로 전환 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한다. 당분간은 지역 농협이 출자하는 형태를 유지하나, 장래에는 일반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 합리화로 생산 자재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기업의 출자비율도 현행 25%에서 50% 미만까지 확대한다.

〈 지방중앙회 〉

- JA전중의 하부 조직인 지방중앙회는 원칙 5년안으로 임의 단체로 전환한다. (농림수산 대신이 승인하면 추가적으로 5년간 유예)
 - * 영세 농가와 겸업농가 등 생산 규모가 작은 농가의 모임인 지역농협의 정점에 있는 것이 JA전중이며, 도도부현마다 설치된 지방 중앙회를 통해 통제하고 있다.

〈 자료원:일본경제신문 1.4 〉

■ 시사점

- '14년 5월에 규제개혁회의가 농업개혁안을 발표한 당초는 JA그룹 전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 내용이 크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개혁안을 대부분은 채용하였다.
- 제3차 아베정권이 시작되면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하나인 농업개혁을 JA그룹 개혁을 통해 가속시키려는 의도이나, 현행 농협제도에 익숙한 농가들의 의식 전환이나 경쟁력 강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